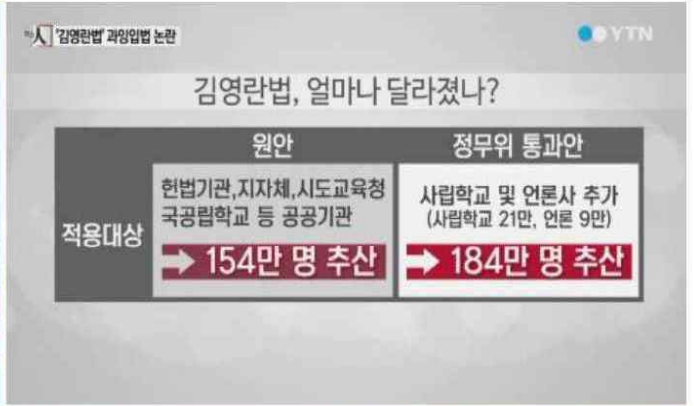


### 장관에게 듣는다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앵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치부 기자 황혜경 나와 있습니다.

이시 오십시오. 세종시에서 오가신다면시요?

[인터뷰]  
12월에 저희가 이전했습니다.

[앵커]  
매일 오가시려면 힘드시겠는데요?

[인터뷰]  
매일은 아니고요. 서울에 일이 없으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죠.

[앵커]  
출퇴근을 안 하시고 거기에서 사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사도 있고요.



2015년 01월 21일 (수)  
방송

[앵커]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인터뷰]

조금 불편하지만 또 그쪽으로 행정도시가 옮겨가기 때문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이 입법이 되면 주무 부처가 되실 테고 위원장님이 만드셨는데 자꾸 김영란법, 김영란법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안 드시나요?

[인터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처음부터 김영란법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추진됐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이성 보법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입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죠?

[기자]

지금 현재 정무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앵커]

법사위에 통과되면 2월에 우선처리하기로 한 것이죠?

[기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를 해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정도 뒤에요.

[앵커]

조금 전 이인경 앵커 설명에서도 직무관련성, 이 부분이 이 법안의 핵심 중 핵심이지 않습니까?

2013년에 수정안 내셨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빠졌다가 나중에 또다시 들어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직무관련성이 없든 없든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이게 핵심인데,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인터뷰]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할 때는 법무부라든지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가지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나 이렇게 경계를 징하자고 해서 정부안이 그렇게 제출된 것이 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100만원이라는 액수를 기준으로 초과를 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 그 밑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입법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질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위헌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부처 공무원인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100만원 이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원래 대상자가 1500만 명 정도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18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 사립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막판 쟁점인데요.

위원장님은 이 방향이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인터뷰]

아시다시피 정부안 하고 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의원발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안 모두 다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 종사자 즉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 이름에도 공직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공립 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어떠냐. 또 KBS, EBS가 들어있는데 다른 방송국이나 언론기관들은 어떠냐, 이렇게 공적인 그런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그 차별을 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여져서 대상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장님?

[인터뷰]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도 저희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인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저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에 있는 여야 의원들께서 그런 이유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해진 마당에 이 법안을 볼 때에는 그것 자체를 과잉 입법으로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만요. 그것은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중지를 모아서 어떤 범위까지 입법을 할 것인가하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인터뷰]



네, 법사위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서 정해지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늘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인들까지로 확대한 것은 민간인들인데 그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언론계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자]

사실 이 법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취재진들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때 액수를 다 적어서 이 이상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영란법이 정말 어렵다고 저는 느낀 게 아까 김영란 당시 전 위원장 인터뷰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을 제가 인터뷰 하려고 또 찾아보니까 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 국민들 잘 모르시죠. 그런데 1800만명이 어쩌면 법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1, 2년 뒤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상황들을 가상을 해 봤습니다. 아주 단순화를 해서 가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상황을 가상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공직자가 참석한 골프모임이 있었는데 골프 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같이 갔었던 사업을 하는 동창이 냈다? 이러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기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직무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이 그냥 정말 그야말로 사적인 관계에서 친구가 냈다면 그거는 이 법에는 저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100만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딱 100만원까지라면 이 법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앵커]

110만원이면요?

[기자]

그러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 경우에도 지금 골프를 예로 드셨는데 골프는 보통 네 사람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공직자 한 사람이 그 돈 비용을 부담을 다 했는지 아니면 각자 여러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만원이 안 돼

서.

[앵커]  
25만원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래서 달라지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을 갖고는 정확히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동창이 예를 들면 공직자하고 좀 이해관계가 잠재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있을 것 같으니까 동창을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공직자를 위한 모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무관련성이 넓게 보면 인정될 가능성도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터뷰]  
직무관련성도 법률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뇌물죄가 재판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은 법리로써 따져야 될 것입니다.

[앵커]  
공직자의 자녀가 아이의 돌잔치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지금 김영란법이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들.

[기자]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저남이나 처제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공직자의 자녀는 같이 살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  
직계가족은 포함입니다.

[앵커]  
같이 안 살아도 포함이죠? 그러면 공직자 자녀가 돌잔치를 했는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2015년 01월 21일 (수)  
방송

예를 들면 친척이 호의로 조카라든지 그 정도의 금품을 건넸다면 그거는 이 법에는 해당사항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친척이 아닌 사람이 줬다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당사자가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당사자가 이런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또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설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공직자의 가족이 받았을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때만 이 규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받았을 때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규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돌잔치를 했다고 하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터뷰]

없는 경우가 대부분, 친척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민법상에 친족이 주는 돈은 예외로써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다 허용하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결혼이라든가 축의금, 부조금 이런 거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축의금, 부조금의 경우에도 1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한테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한다고 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돈이 이례적으로 많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직무관련자로 부터는 지금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입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위임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의 행동강령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까. 물론 여론을 다 시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에 의하면 5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관 간에 협의가 점점 행정에서도 중요해지는데 예컨대 민관이들하고 만나서 그러다 보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제약되고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아예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 복지부능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요.

기업인이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만났는데 식대를 30만원 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이 경우에는 이미 이 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원 이상 식대는 행동강령 위반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몇 명하고 만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만원인데 공무원 10명하고 만났다? 그러면 3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고 또 인원에 따라서 다를 텐데 과도하게 받았다면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인터뷰]

하여튼 황해경 기자님의 설명이 거의 맞는데 지금 현재도 행동강령에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든지 또는 식사대접을 받는다는 게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시행령을 만들면 이 부분도 정해야 하는데 크게 이 금액을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관행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고쳐보자는 것이죠. 업무협의를 사무실에 가서 밥 안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앵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네요.

[인터뷰]

이것은 이 법을 바라다 보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뿌리잡고 있는 관행에서 이 법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꿔보자는 게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앵커]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이 왜 그걸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해당 사들이요.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일선 기사 시설에 예컨대 어떤 공무원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마땅히 이걸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질질 끌고 있다든지 안 해 주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부처 공무원한테 가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딱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부정청탁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부정청탁은 15가지로 저희가 유형화를 해놨습니다, 소위 정무위를 통과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처음에는 부정청탁을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부정청탁이다, 예외로 해당되는 것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애매할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해당되는 걸 15가지 유형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부정청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인허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으시고 그 내용을 사실 알리시고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것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민원에보제입니까, 어떤 거입니까?



2015년 01월 21일 (수)  
방송

[인터뷰]

민원예보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민원을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요, 여름이 되면 예를 들면 악취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반복되는 민원들의 경우를 미리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민원예보제입니다.

[앵커]

서로 기관들 간에 떠넘기는 핑퐁을 막기 위한 방안도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런 것도 오늘 보고드린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169만 건 정도가 작년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3만 6000건 가량, 한 2% 정도 되는데 이것이 3회 이상 이렇게 기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면 핑퐁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세 번째 움직일 때 그 민원을 저희 권익위가 나서서 이것은 어느 부처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올해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오늘 황 기자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일 눈에 띄거나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였나요?

[기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두 가지 외에도 장관행동강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라는 취지에서 예를 들면 업무와 관련돼서 강의를 했을 때 고액 강의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를 받지 않는다는지 그리고 경조사사가 있을 때 공무원행동강령에 맞게 5만원 이내로 받는다는지 아니면 아예 안 받는다는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관행동강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만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동료 국무위원들, 장관께서 반응이 어떠신가요?

[인터뷰]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전에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었고요. 오늘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처음으로 공표를 했는데 이제 국무회의에 가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 아까 강의를 받으셨지만 그것도 제한되어 있고 또 경조사에 관해서도 직무관련한 통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 때 화환 같은 걸 보낼 때도 자기 직무를 표시하면서 사적인 어떤 데다 못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알게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명확히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담, 횡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것처럼 장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장관님들께서도 속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지만 다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얼굴을 보면 아마 싫다고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치부 황혜경 기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권익위,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장관이 직무관련 강의 시 강의를 받지 않고, 취임 시 청렴서약을 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장관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합니다.

이밖에도 기관끼리 민원 처리를 미루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3회 이상 미뤄지면 권익위가 직권으로 처리 기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 '민원절차 간소화' ... '핑퐁 민원' 없어질까?



[앵커]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관할이 아니라며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 미뤄진 경험 있으신가요?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핑퐁 민원'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공공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접수된 민원은 169만여 건.

이 가운데 3만 6천여 건은 세 번 이상 처리 기관이 바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타 기관으로 서로 미룬 겁니다.

때문에 민원 접수에 걸린 시간만도 평균 4일이 넘습니다.

권익위가 올해부터는 이같은 '핑퐁 민원'을 해소하겠다고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관련 훈령을 개정해 민원이 세번째 이송될 때는 권익위가 직접 처리 기관을 확정해 책임지고 처리기로 한 겁니다.

부처별로 연간 4백만 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관련 기관이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예보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임진홍,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장]

"항상 주기성을 띄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은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소음·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주기적인 민원) 발생 2-3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정보를 줘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하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해 재정 누수를 막는 것도 권익위의 중점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강의시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경조금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칭 '장관 행동강령'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이충호, 권익개선정책국장]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 직무 관련 강의 시 강의료 안 받기 등 가칭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군사시설 이전 같은 파급 효과가 큰 대형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조정인으로 참여시키고,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 '국가혁신' 업무보고..행자부 등 8개 부처



지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혁신을 주제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기자!!

기자>강필성기자/정부서울청사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남1>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기자>

네,현재 국가혁신을 주제로 8개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중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인데요,

이들 부처는 모두 4개의 큰 주제로 나눠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보고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한사회,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과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2>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먼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불법집회와 시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확대 등 엄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학대사건이 일어날 경우 즉각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차원에서 피해구조금을 대폭 올리고 마을번호사제도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투명한사회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칭 '장관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갈등민원 조정능력을 올리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남3>

그리고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전혁신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육상과 해상 재난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해 대응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내난은 전국 30분, 해상재난은 전국 1시간 이내에 긴급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연중실시해 진달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특히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지방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책임 읍면동제를 추진하고, 현장중심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에 스펙을 초월한 국민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전 직급에 경력채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강필성입니다.



## 권익위, '김영란법'·'집단민원 조정법' 등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금지법과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월 중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MTN O 머니투데이방송 PBC 뉴스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국제신문 경상일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 "사회 비정상·경제 장애요인 국가혁신으로 해결"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정부 8개 부처 '국가혁신' 분야 신년 업무계획 합동 보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막는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8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혁신' 분야 신년 업무계획을 21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간의 협업으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로 이뤄졌다.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괄보고를 통해, "2015년은 국가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며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준법문화 구현, 범죄불안 해소, 기초 법질서 정립, 법치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 선진화를 위해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참여 안전대진단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식품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도 부처별 협업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정부운영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을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과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국민참여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식품사 대표, 112 상황실 근무자,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발제한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토론에서는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 정립,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과 법적 역량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날 보고는 올해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많은 8개 부처가 참여했고, 서울과 세종의 지리적 분산상황에서도 '정부통합의 사소통시스템(나라e음)'을 활용해 자료를 공유·토론해 준비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東 亞 日 報 **CHANNEL** 제주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2015년 01월 22일 (목)  
정치 05면

전남도민일보 광주타임즈 충남일보 The 대한일보 경인종합일보

호남매일 경기일보 江原日報 每日新聞 **metro**

한국일보 국민일보

# 공무원 '청렴 교육'... 경조사 통지 제한

## 부패 막을 장관행동 강령 제정 '핑퐁 민원' 권익위가 처리기관 조정

정부가 행정기관끼리 민원을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민원'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행동 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민원 처리 중 3회 이상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민원은 3만6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민원 접수 지연 기간이 평균 4.7일이나 됐다. 권익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되면 직접 처리 기관을 조정해 접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5일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강의하면 강의로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조사 통지를 제한할 계획이다. 장관 취임 시에는 청렴서약을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장관행동 강령을 도입해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도 이날 보고했다.

국민소통 강화의 대책으로 규제개혁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 포털 사이트를 국민신문고와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소통韓(한)마당'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아주경제

2015년 01월 22일 (목)

정치 04면

# “안전·정부혁신 반드시 성과내야... 적폐 해소는 숙명”

## 박 대통령 '국가혁신' 업무보고

“올해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도약이나 경제냐의 갈림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살리기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참으로 드물게 우리가 맞은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적폐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되어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이 광복 70년을 맞았는데 지난 70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성과를 만들었지만 사회 곳곳에 묵은 적폐가 쌓인 것도 사실”이라며 “어느 곳이나 양자가 있고 음지가 있듯 우리 역사도 돌아보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 만큼 과감한 국가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야겠다”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적폐를 잘 청소하고 해결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때 통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바람직한 통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수사 확립과 관련하여 “권리를 추상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겠다”며 “법집행과 한법기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찾아다니며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도 계속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법률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국민 불편법령을 정비하는 데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과 관련해 “올 초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점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가혁신’ 업무보고는 △법집행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 등 4개 주제별로 이뤄졌다.

정중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2-3개 동을 묶은 ‘대동’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 지정해 보석 이동을 제한하며, 성과 위주로 인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집행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준비문화 구현, 범죄불안 해소, 기초 법집행 정립, 법치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관리 컨트론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참여 안전 진단단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원자력·식품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 관리도 부처별 협업을 통해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주진 기자 j72@



346 X 135 mm



# 권익위,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원회,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술선수범을 통한 위로부터의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

획이다.

또 권익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민관유착 비리 등 '3대 핵심 부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민원이 곧 국민의 소통 통로라고 보고 국민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인 '소통韓마당'도 마련되며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기로 했다.

이외 함께 권익위는 사회적 신뢰 저하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한다고 판단, 정부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층·지역 간에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간접비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또 권익위는 사회간접비용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재우기자 hscul38@metroseoul.co.kr



# 권익위,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조속히 제정, 위로부터의 청렴운동 실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본격 운영,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징벌적 환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2015년부터 전개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같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올해는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권익위는 지난 5년 간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법 제정 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받게 되는 만큼 이른바 '스폰서' 관행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부합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 강의시 강의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3대 핵심 부패'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 관행과 문제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클린피드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 구체화 및 고위직 퇴직 시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인사처),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여부 점검 등 퇴직 공직자와의 불합리한 유착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 재정누수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허위·부정청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 안전신문고(안전처), 복지로(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여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가칭) 소통 한(韓)마당'을 행자부와의 협업을 통해 구현하기로 했다.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하고 확정해 민원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약 400만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악취 등 되풀이 되는 생활불편 사항은 관련기관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뢰 확충을 위해선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 이를 일시정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부패척결추진단과의 협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cunjam@news1.kr





2015년 01월 21일 (수)  
경제

##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할 것"..국가혁신 업무보고

[뉴스핌=정연주 기자]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엄단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8개 부처(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과 정부혁신' 4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법무부는 위험정당 해산의 후속조치로 헌법가치 부정세력 척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골자로 하는 업무방향을 내놨다.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입법화 한다는 내용이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이날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바 없어 입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공수사 전문 인프라 구축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확대·정북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행력 행사시 구속 등 불법시위·공무집행방해 엄벌할 방침도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내용이 포함되게 하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법 교육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4대 사회악 대응을 강화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학대사건, 강력범죄 발생 시 즉각 사법적으로 개입할 계획도 제시됐다.

이 밖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투명한 사회' 분야 보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장관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분야를 보고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육해상 재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와 육상재난 전국 30분, 해상재난 전국 1시간 내 재난현장 긴급대응을 비롯해 국가안전 대진단·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의 방안이 나왔다.

'정부혁신' 분야 보고에서는 '정부 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이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괄보고에서 "2015년은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광복 70주년과 건국67주년의 역사적 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